eISSN 3140-409X

ISSUE BRIEF

이슈브리프 910호
(2026.10.29)

북한 경제는 과연 호황일까?

제910호

임수호 shlim@inss.re.kr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국문초록

최근 북한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를 호황으로 보는 시각도 늘고 있다. 반면 시장 환율과 물가 폭등으로 민생 지표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이른바 '호황'은 전쟁 특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며, 군수경제와 관련 중공업에 집중된 '폐쇄적 호황'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아가 군수경제의 호황은 민수부문에 '구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살펴본다. 전쟁 특수가 종료될 경우, 이러한 구축효과와 민생 지표의 악화가 겹쳐 거대한 역풍과 민생 파국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키워드: 전쟁 특수, 폐쇄적 호황, 구축효과, 환율·물가 폭등

“놀라운 경제 성공담”(?)

최근 북한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북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3년 3.1%, 2024년 3.7%에 이어 2025년에도 3.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3%대의 성장을 이어갔다. 이는 같은 기간 세계 평균(3.2%→3.2%→3.0%)보다는 약간 높지만, 개도국 평균(4.3%→4.2%→4.1%)이나 저개발국 평균(4.4%→4.0%→4.2%)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17~2022년의 장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와 2023년 하반기에 시작된 대러 무기수출 효과를 감안하면 3%대 성장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 여기에는 제재에 따른 만성적인 설비·부품·자재 부족과 성장이 특정 분야(군수·건설)에 집중되는 북한 특유의 경제 구조 및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러한 ‘기대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의 경기 회복세를 ‘호황’으로 부풀리고 왜곡하는 시각이다. 올해 중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 성공담”(World’s Most Surprising Economic Success Story)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놓았고,[1]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팬데믹과 러우전쟁을 지렛대 삼아 이뤄낸 “기적적인 변화”(Miraculous Transformation)에 주목했다.[2] 이러한 선정적인 평가들은 외신이나 국내언론에서 최근까지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근거는 언뜻 보기에 매우 직관적이다.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의 지구관측그룹 연구진이 위성으로 촬영한 북한의 밤 불빛이 팬데믹 봉쇄기였던 5년 전보다 3배나 밝아졌다는 점, 유류 저장시설 인근의 선박 물동량 급증과 주차장 차량 밀집도 증가, 그리고 평양을 다녀온 서방 인사들의 목격담이 주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매년 1만 세대씩 치솟는 화성지구 등의 초고층 아파트 단지, 우버를 본뜬

1) Dasi Yoon and Timothy W. Martin, "The World’s Most Surprising Economic Success Story Is…North Korea: Arms sales to Russia and goods from China provide boost, despite sanctions; ‘the regime is wealthier than ever’,"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7, 2026).

2) Choe Sang-Hun, "A ‘Miraculous Transformation’: How Kim Jong-un Fortified North Korea: He used the pandemic to ruthlessly tighten his grip on the country. Then he energized its economy by leveraging Russia’s war in Ukraine," *The New York Times* (June 8, 2026).

차량 호출 앱 '삼흥'과 일상화된 QR코드 결제, 50여 개의 브랜드로 늘어난 스마트폰,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와 BMW 매장 풍경은 북한이 기나긴 고립을 끝내고 본격적 성장 궤도에 오른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시선을 주민의 일상이 영위되는 터전인 시장(장마당)으로 돌리는 순간, '호황'의 서사는 무너지고 만다. 북한의 시장 지표는 정반대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4분기부터 2026년 3/4분기까지 원/달러 환율과 원/위안 환율은 각각 646.5%, 697.2%나 폭등했다. 같은 기간 쌀, 옥수수, 돼지고기, 휘발유, 경유 가격은 각각 599.4%, 447%, 368.3%, 527%, 669.8% 폭등했다. 이 같은 장기 환율·물가 폭등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7년간, 2009년 말 화폐개혁 조치 이후 3년 6개월간에 이어 3번째 장기 폭등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폭등세가 2026년 4/4분기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표 1> 최근 북한 환율·물가 상승률(2024년 1/4분기 ~ 2026년 3/4분기)

단위(%)	원/달러	원/위안	쌀	옥수수	돼지고기	휘발유	경유
누적	646.5	697.2	599.4	447.0	368.3	527.0	669.8
분기 평균	64.7	69.7	59.9	44.7	36.8	52.7	67.0

자료: 한국은행 북한 시장지표, <데일리NK> 북한 시장동향을 종합하여 필자 작성.

물론 최근 몇 년간 체계적으로 진행된 '유통 재국영화' 조치로 인해 현재 민생에서 '사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최근 <데일리NK>가 진행한 신의주 현지조사에 따르면, 유통 재국영화 조치의 핵심 대상인 양곡 구매에서 종합시장('사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0%에 달하고, 양곡판매소(이른바 '국가 시장') 비중은 40%에 불과했다. 또한 양곡을 제외한 생필품 구매에서 '사적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에 육박했다.[3]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양곡판매소 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추종(시장가격 대비 10%

3) 기획취재팀, "종합시장은 여전히 유통의 중심인가," <데일리NK>(2026.10.19).

가량 낮은 수준)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충격이 약간 작을 뿐 '사적 시장'의 가격 폭등은 '국가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되는 것이다.

위성 사진과 GDP 통계가 말해주지 않는 진실

그렇다면, 거시 물량 지표(GDP)가 완연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내고 위성 데이터는 '역대급 호황'을 가리키는 반면, 민생 지표는 '역대급 파탄'을 가리키는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우선 짚어야 할 대목은 외부 관찰자가 의존하는 위성 데이터와 성장률 통계의 함정이다. 최근 북한 경제의 추세를 분석할 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물량 데이터와 함께 위성 야간조도 데이터가 널리 쓰이고 있다. 전자가 북한 경제연구에서 활용되는 '전통적 데이터'라면, 후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대안 데이터'이다. 야간에 불빛이 밝아지면 그만큼 생산과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는 전력이 시장 원리에 따라 배분되는 시장경제에서나 통하는 공식일 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선 2023~2025년 기간 발전량은 2022년 대비 2023년 대폭 떨어졌다가(5,944억kwh→5,880억kwh), 2024년과 2025년에는 2022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5,956억kwh) 회복됐다. 그렇다면, 나라의 전체 발전량은 조금 늘어났는데, 어떻게 위성에 찍힌 불빛은 3배나 밝아졌을까? 답은 간단하다. 팬데믹 기간 북한이 최악의 암흑기였다는 '기저효과' 때문이고, 또한 지방과 일반 공장에 돌아갈 전력을 평양의 초고층 살림집 경관과 우상화 시설 조명, 군수공장, 항만, 제철소 등에 몰아줬기 때문이다. 위성은 군수공장의 열기와 선전용 네온사인을 성장으로 기록하지만, 그 배후에는 전력 공급이 줄어든 지방 주민들의 어둠이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추계한 3%대 실질 GDP 성장률 역시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률처럼 해석해서는 안된다. 북한의 GDP 추계는 무연탄, 철강, 시멘트, 건물, 발전량 등 물량(부피)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아래 표가 보여주듯이, 최근 북한 경제의 성장은 중화학

공업과 건설업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부족한 전력과 자원을 쥐어짜 러시아에 보낼 포탄을 대량으로 찍어내고, 최고지도자의 '애민 사상'을 과시하기 위해 지방 공장과 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면, 중화학 공업과 건설업 산출량은 급증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포탄과 시설은 주민 후생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회적 과제'의 명목으로 무보수 노동과 현물이 건설 현장에 징발되면서, 통계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가계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지는 역설이 벌어진다.

<표 2> 북한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2017~2025)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경제성장률	-3.5	-4.1	0.4	-4.5	-0.1	-0.2	3.1	3.7	3.5
농림어업	-1.3	-1.8	1.4	-7.6	6.2	-2.1	1	-1.9	3.6
광공업	-8.5	-12.3	-0.9	-5.9	-6.5	-1.3	4.9	7.6	4.9
광업	-11	-17.8	-0.7	-9.6	-11.7	4.6	2.6	8.8	1.6
제조업	-6.9	-9.1	-1.1	-3.8	-3.3	-4.6	5.9	7	6.6
(경공업)	0.1	-2.6	1	-7.5	-2.6	5	0.8	-0.7	3.8
(중화학공업)	-10.4	-12.4	-2.3	-1.6	-3.7	-9.5	8.1	10.7	7.8
전기가스수도업	-2.9	5.7	-4.2	1.6	6	3.5	-4.7	0.9	-0.4
건설업	-4.4	-4.4	2.9	1.3	1.8	2.2	8.2	12.3	6.3
서비스업	0.5	0.9	0.9	-4	-0.4	1	1.7	1.3	1.8
(정부)	0.8	0.8	0.5	0.8	0.1	0.6	0.7	1.2	1
(기타)	-0.3	1.2	1.8	-18	-2	2.7	5.5	1.7	5.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외딴섬(enclave)으로서의 군수경제와 구축효과

다음으로 짚어야 할 문제는 북러 군사협력이 만들어내는 호황의 폐쇄성이다. 북한이 2023년 8월부터 러시아에 수출한 군수물자와 2024년 10월부터 파견한 병력의 경제적 가치는 2025년 말 기준 누적 약 1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6년에도 2025년과 동일한 규모의 물자가 수출되고 병력 수준이 유지됐다고 가정하면(2025년 47.8억 달러), 2026년 말 현재 가치는 누적 약 1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북한 GDP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4] 국내외

4) 임수호,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의 경제적 효과," <INSS 전략보고> 374호(2026).

언론이 북한 경제의 '호황'을 언급하는 핵심 근거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특수한 경제구조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착시이다.

북한의 군수경제(제2경제)는 1970년대 초반부터 내각이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에서 분리되어 당 군수공업부(제2경제위원회)가 직할 관리하고 있다. 북한에서 군수-민수경제 운영의 대원칙은 군수경제에서 창출된 잉여는 군수경제 내에서만 활용하며, 반면 민수경제에서 창출된 잉여는 필요에 따라 군수경제로 전용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노선은 민수 잉여의 군수 전용을 극대화한 노선이며, 김정은 시대 전반의 경제-핵 병진노선은 이러한 전용의 정도를 최소화한다는 노선이다. 9차 당대회 김정은 추대서에서 시사된 '경제-국방 총력집중노선'은 대러 무기수출에 따른 군수경제 활성화로 더이상 이러한 전용이 필요 없다는 선언이다.[5] 요컨대 노선이 어떻게 변하든 군수경제에서 창출된 잉여는 군수경제 내에서만 활용한다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이 '전쟁 특수'로 획득한 외화는 WMD나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기술·부품·자재를 획득하고, 관련 군수·연구 시설을 확충·가동하는 데 사용되며, 극히 일부만 최고지도자의 재량에 따라 민수경제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이 같은 민수 활용분마저 전반적인 경제 기반 확충이나 민생 향상에 사용되기보다는 핵심 계층에 대한 배급량 증가 등 정치적 목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살인적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아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미뤄볼 때, 군수물자 수출 대가로 획득한 식량 일부가 취약 계층 주민들에게 배급되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전쟁 특수'는 주로 국방력 강화로 귀결되고 있는데,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핵-재래식 병진노선'을 천명한 것도 이 같은 자신감의 발로라고 보인다. 반면, 산업구조는 더욱 왜곡될 뿐 아니라, 나아가 '경제-국방 총력집중노선'의 예고와 달리 민수경제에 대한 '구축 효과'

5) 임수호, "'경제-국방 총력집중노선': 9차 당대회 이후 북한 경제전략노선 전망," <INSS 이슈브리프> 809호(2026).

(crowding-out effect)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한국은 베트남전 특수를 산업구조 고도화(중화학공업화)의 재원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전쟁 특수를 민수경제와 단절된 군수경제와 관련 중공업에 집중 투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전쟁 특수를 지탱하기 위해 부족한 전력과 원료·연료·자재, 노동력을 지방과 민수, 시장에서 끌어다 '군수 임가공'에 투입하고 있다. 전쟁 특수로 군수 및 관련 중공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민수부문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

살인적인 시장 환율·물가 폭등 역시 북한 당국의 정책적 의도와 관련이 있다.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거래되던 노동력과 상품을 국가부문으로 흡수하기 위해 2023~2024년 근로자 월급을 평균 20배 가량 인상하고, 상품의 국정 판매가 역시 대폭 인상했다. 문제는 인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 나아가 대규모 살림집 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중앙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막대한 원화와 가화폐(돈표)를 찍어낸 것이다. 그 결과가 시장 환율과 물가 폭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물가 폭등은 수요 확대나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통화 증발에 기인한다.[6] 이는 국가가 돈을 찍어 국책 사업을 벌이고, 그 대가를 물가 폭등이라는 '인플레이션 조세' 형태로 주민들의 지갑에서 강제 징수한 셈이다.

물론 명목 임금 상승률(20배)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질소득이 증가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에서 생계를 임금 및 배급으로 100% 보장받는 계층은 당·정·군 간부, 군수경제 노동자 등 핵심계층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의 경우, 임금 인상 이전에 수입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했고, 지출에 필요한 수입 대부분은 시장활동으로 충당해왔다. 따라서 임금이 20배 오르더라도 주민의 명목소득 상승분은 크지 않는 반면, 지출비용의 경우 물가상승 충격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6) 임수호, "찻잔 속의 태풍인가, 경제적 쓰나미인가: 최근 북한 시장 환율 및 물가 폭등의 원인과 전망," <INSS 전략보고> 377호(2026).

실질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상가상으로 시장 활동 자체가 당국의 통제로 위축되고 있다.

'정권의 부(富)'와 '국민경제'를 구분해야

"북한 경제는 호황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북한이 누리는 것은 국민경제의 호황이 아니라, 전쟁 특수와 인플레이션 조세로 쌓아 올린 '정권 재정'의 일시적 호황이자 약탈적 성장에 불과하다. 국내외 언론들이 주목하는 평양의 스카이브리지 레스토랑과 QR코드 결제는 특권경제의 풍경일 뿐, 북한 경제 전체의 자생력 회복을 뜻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기형적 호황의 유통기한이다. 현재 3%대 성장과 일부 지역·부문의 호황은 러우전쟁이라는 산소호흡기에 매달려 있다. 향후 종전이나 휴전으로 러시아 포탄 수요가 멈추고 그 반대급부 공급이 중단되면, 증설된 군수 라인과 지방 공장들은 고철 덩어리로 전락할 것이다. 이 와중에 과잉 유동성이 폭발할 경우, 국가 유통망과 장마당이 동시 마비되는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대북 인식과 정책도 외형적 총량 지표의 착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포탄 생산량과 전시성 아파트 공사가 부풀려 놓은 GDP 숫자나 평양의 밤 불빛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의 붕괴와 평양-지방간 양극화가 체제 밑바닥에 어떤 균열을 축적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주시해야 한다. 전쟁 특수가 끝난 뒤 북한 경제를 덮칠 역풍과 민생 파국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